

2022 유네스코 이슈 라운드 테이블 결과 보고서

2022년 12월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unesc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 라운드 테이블 개요

- 제목 : 유네스코 이슈 라운드 테이블 (Round Table on the Ethics of AI and Cyberspace)
- 일시 : 2022.11.16.(수) 19:00-22:00 (한국시간)
- 장소 : 온라인 (유네스코 사무국 온라인 회의 플랫폼 이용)
- 주최 : 외교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사무국 (공동주최)
- 언어 : 영어, 프랑스어 (유네스코 사무국 동시통역 제공)
- 참가자 : 약 200여 명 (최대 동시접속자 약 110여 명)
 - 박상미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대사
 - 이주원 외교부 유네스코과장
 - 권인화 외교부 유네스코과 외무사무관
 -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김귀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적연대본부장
 - 김은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협력팀장
 - 백영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협력팀 전문관
 - Firmin Edouard Matoko 유네스코 아프리카·대외협력부문 사무총장보 (ADG/PAX)
 - Gabriela Ramos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부문 사무총장보(ADG/SHS)
 - Tawfik Jelassi 유네스코 정보·커뮤니케이션부문 사무총장보(ADG/CI)
 - Dov Lynch 유네스코 회원국관계과장
 - Guilherme Canela de Souza Godoi 유네스코 표현의자유·언론인안전과장
 - Fuad Pashayev 유네스코 국가위원회팀장
 - Irakli Khodeli 유네스코 생명윤리과학윤리과 전문관
 -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
 - 김수아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교수
 - Matthias C. Kettmann 오스트리안 인스부르크대학 교수
 - Lina Oueidat 레바논 ICT 국가조정관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포함) 전 세계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관계자, 세션별 주제(인공지능 윤리, 사이버 공간에서의 혐오·차별 대응) 분야 전문가가 일반청중으로 참석

○ 주제 및 구성

- 개회식 (19:00 - 19:20)

- 좌 장: Dov Lynch 유네스코 회원국관계과장
- 개회사: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환영사: Firmin Edouard Matoko 유네스코 아프리카·대외협력부문 사무총장보
- 축 사: 박상미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대사

- 세션 1

- 주 제: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 이행을 통한 온라인상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 좌 장: Irakli Khodeli 유네스코 생명윤리과학윤리과 전문관
- 기조발제: Gabriela Ramos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부문 사무총장보
- 발 표: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COMEST 부의장
- 발 표: Matthias C. Kettmann 오스트리안 인스부르크대학 교수
- 질의응답

- 세션 2

- 주 제: 사이버 공간 혐오·차별 대응을 위한 정책제언
- 좌 장: Guilherme Canela de Souza Godoi 유네스코 표현의자유·언론인안전과장
- 발 표: 김수아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교수
- 발 표: Lina Oueidat 레바논 ICT 국가조정관
- 질의응답

- 폐회

- 진 행: 김은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협력팀장
- 폐회사: Dov Lynch 유네스코 회원국관계과장

2 주요 내용

- 라운드 테이블 참석자들은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가 2021년 제4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후 회원국의 이행이 요구되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상 차별과 혐오의 문제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개최된 동 라운드 테이블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함.
 - 유네스코 사무국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외교부의 지원으로 발간하는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가 유네스코의 주요 이슈에 대한 회원국 내 숙고와 토론을 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유네스코 사무국이 각 이슈별로 취해야 할 후속조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동 브리프 자료의 발간과 라운드 테이블을 기획·추진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외교부에 감사를 표함.
- 제1세션에서는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가 채택되기까지의 내부 준비과정과 동 권고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이 소개되었으며,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 기준은 첨단기술의 발전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 정비되지 않은 첨단기술의 발전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강조됨.
- 제2세션 발표자들은 (인터넷, 온라인 공간을 포함한) 과학기술만으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공히 지적하며, 첨단기술 외에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3 상세 발표 내용

가. (19:00~19:20) 개회식

□ 개회사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2022년 유네스코 이슈 라운드 테이블’을 공동 주최해 준 외교부와 유네스코 사무국에 감사를 표함.

- 금번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유네스코 회원국-국가위원회-사무국 간 ‘삼자협력(tripartite cooperation)’ 체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하며, 특히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간 교류·협력이 다양한 층위에서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함.
 - 이번 계기에 전 세계 국가위원회가 유네스코의 권능영역 내 다양한 전문가·학자 및 그 외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더욱 긴밀히 연계될 수 있기를 바램.
- 과학기술이 보통 사람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과 사이버 공간의 역할에 대한 보다 세심한 숙고가 필요한바 금번 라운드 테이블의 주제로 설정하였음.
 - 특히, 2021년 제41차 유네스코 총회 계기에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가 채택된 이후 각 회원국의 권고 이행 준비가 요구되고,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간 내 혐오와 차별이 만연한 상황에서 금번 라운드 테이블 주제의 시의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음.

□ 환영사 (Firmin Edouard Matoko 유네스코 아프리카대외협력부문 사무총장보)

- ‘2022 유네스코 이슈 라운드 테이블’을 기획해 준 외교부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서 유네스코의 현재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인공지능 윤리’와 ‘사이버 공간에서 혐오·차별 대응’을 주제로 다루는 점을 환영함.
 - 인공지능과 사이버 공간은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유네스코의 모든 권능영역과 연계되어 있음. 따라서, 유네스코는 이러한 과학기술이 가져오는 기회와 도전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임무를 지님.
 - 유네스코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부문에서 해당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인문사회과학(SHS)부문과 정보·커뮤니케이션(CI)부문에서 오늘 라운드 테이블에 참가하여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나눌 예정임.
- 유네스코는 ‘인공지능’과 ‘사이버 공간’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소지역·지역·글로벌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음.

- 아프리카 내 소지역 차원에서는 유네스코와 나미비아 정부가 협력하여 ‘유네스코-남아프리카 인공지능 포럼(UNESCO- Southern Africa sub-Regional Forum on Artificial Intelligence)’을 개최(2022.9.)하였음.
-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는 ‘인공지능’ 및 ‘사이버 공간’과 관련한 유네스코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부문 간 파트너십(interdisciplinary partnership)과 자원을 동원하고, 관련 사업활동의 성과를 강화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유네스코슬로베니아위원회는 슬로베니아 정부가 유치한 유네스코 카테고리2 기구인 ‘국제인공지능연구센터(IRCAI: International Research Centre on Artificial Intelligence)’의 다양한 활동 결과를 유네스코 사무국과 전 세계 네트워크에 공유해 주고 있음.
 - 유네스코레바논위원회는 ‘사이버 공간 내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베이루트 국제 컨퍼런스(Beirut International Conference)’를 개최(2017.5.)하는 등 동 부문에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함.

□ 축사 (박상미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대사)

- 정보·커뮤니케이션·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인공지능’과 ‘사이버 공간’을 주제로 외교부와 유네스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게 된 점을 축하드리며, 이번 라운드 테이블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감사를 포함.
 -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해서는 제41차 유네스코 총회 계기에 「인공지능 윤리 권고」를 채택하는 공동의 성과를 거둔 바 있음. 동 권고 채택 과정에서 금번 라운드 테이블의 발표자이기도 한 한국의 이상욱 교수가 관련 예비보고서를 작성하는 국제 전문가의 일원으로 참여한 바 있으며, 한국은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 초안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의(Virtual Asia-Pacific Consultation on the first draft of the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를 2020년 7월 유네스코와 공동 개최하기도 하였음.

- 우리에게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를 확산하고, 효율적인 국별 이행을 촉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고 있는바, 한국은 앞으로도 유네스코와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사이버 공간’의 엄청난 영향력과 취약성을 동시에 목격하였으므로 사람들의 삶을 보다 번영케 하는 동시에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 주제와 관련해서도 유네스코와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이 모든 과정에서 국별 전문가와 정책결정자를 규합하는 유네스코의 역할이 필수적인바, 다양한 국가 전문가와 유네스코 사무국 관계자, 그리고 회원국 정부 관계자가 함께 협의하는 이번 라운드 테이블의 구성과 기획이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함.

나. (19:20~20:35) 세션 I: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 이행을 통한 온라인상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rotecting human rights online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 기초발제 (Gabriela Ramos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부문 사무총장보)

- 전 세계 개개인, 사회 및 환경에 인공지능 관련 윤리적인 도전과제들이 주어지고 있는바 유네스코는 「인공지능 윤리 권고」를 채택하였음.
 - 「인공지능 윤리 권고」는 인공지능 관련 현재와 미래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이자, 온라인상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함.
 - 「인공지능 윤리 권고」는 강도 높은 토론과 국제 협의의 산물이며,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기여하였음. 한국은 자국민 개인 전문가의 활동뿐만 아니라 우호그룹(Group of Friends) 참여 등을 통해 동 권고가 채택되기까지 상당한 기여를 한바, 이에 감사를 표함.
- 현재 유네스코는 「인공지능 윤리 권고」이행을 위해 ‘준비 정도 평가 방법론(readiness assessment methodology)’ 고안 및 ‘윤리 영향 평가

(ethical impact assessment)'를 준비 중임. 이와 같은 준비사항은 강력한 국제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며, 고위급 국제 전문가 그룹이 유네스코 사무국에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연합 국가들이 개발도상국과 소도서개발도상국(SIDS)을 대상으로 관련 시범활동(piloting)을 지원하고 있음.

- 아울러, 제1차 '인공지능 윤리 글로벌 포럼(The First Global Forum on the Ethics of AI)'이 오는 12월 13일 체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2023년에 한국이 제2차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알고 있는바 이와 관련한 기대를 표명함.

○ 오늘 '라운드 테이블'이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한 전 세계 다양한 전문가의 지식을 공유하고, 동 부문에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함.

□ 발표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COMEST 부의장)

○ 먼저, 기본적인 '인권'과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혁신의 발전'과 같은 가치 간 균형을 찾고, 두 가치의 충돌을 적절히 조율해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표를 시작하고자 함.

○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준비 작업에 직접 참여한 '내부자'로서 동 권고의 전반적인 준비 과정 및 주요 내용과 특징 등을 소개함.

- △비상설전문가집단(AHEG: Ad Hoc Expert Group)의 활동사항 △정부간회의(2021년 4월, 6월)를 통한 윤리 권고안 검토 및 유네스코 총회 계기(2021년 11월) 권고 채택 △인권 중심 가치와 원칙 △인공지능의 전주기적 윤리적 고려 △권고 관련 정책 행동 및 후속조치 (윤리 영향 평가, 준비 정도 평가, 관측소 설치 등)의 현실성·실효성 강조 경향 △적응적 거버넌스(adaptive governance) 및 국제협력 강조 경향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을 '조화'(harmony) 시키는 작업 방식의 특성 등을 소개함.

○ 이후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와 관련한 한국의 대응 상황과 사례를 소개함.

- 한국에서는 「인공지능 윤리 권고」 이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원칙·점검리스트·법률’ 부문을 아우르며 주요 행위자로 활동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인공지능 윤리 권고」 채택 이전부터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력과 위험성을 인지하며 동 부문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왔음.
- 그간 한국은 정부 주도로 과학기술혁신의 ‘발전’ 측면에 집중해 왔으나, 최근 들어 과학기술혁신의 ‘사회·문화’적 측면에도 주목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에 인간을 중심에 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발표하였고, 이후 2022년에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안)」과 「인공지능 윤리 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안)」을 발표하는 등 윤리 기준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인공지능 개발자들에게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음. 이와 별도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과 같이 정보통신기술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모색되고 있음.
- 한편,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권고 초안 및 최종안의 국문 번역을 제공하는 한편, 권고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러 윤리적 쟁점을 일반 시민에게 보다 널리 알리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배포하고 관련 자료를 책자로 배포하는 등 유네스코 권고가 강조한 교육 관련 정책 행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 발표 (Matthias C. Kettmann 오스트리아 Innsbruck 대학교 교수/독일 Leibniz Institute for Media Research | Hans-Bredow-Institut 선임 연구위원)

- 유네스코는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의 윤리적 측면에 집중해 왔으며, 2021년 11월 제41차 총회 계기에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가 19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 동 권고의 준비 및 채택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상충하기도 하였으며, 그 결과 강력한 법적구속력이 아닌 유연한 구속력(soft binding power)을 지니는 권고의 형태로 채택되었음. 권고의 이러한 특징은 권고가 지니는 한계가 아닌

강점으로 작용함. 비록 유연한 구속력을 지니는 권고이지만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한 국제적인 '규범'으로서 윤리적 위상과 권위를 지니게 되었음.

- 동 권고는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한 최초의 국제적 제도적 장치(global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라는 의미를 지님. 또한, 권고안 준비 과정에 다중 이해관계자가 긴밀히 참여하였으며, 권고 내용 전반에 걸쳐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윤리'라는 추상적인 개념과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연계하는 강점을 지님. 아울러 그간 부차적으로 다뤄졌던 인공지능 관련 기타 부문 및 사회 소외계층에 집중하면서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님.
-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이행과 관련하여 독일이 유네스코 독일위원회를 통해 도출한 바 있는 △시민의 권리 보호 △다양성 강화 △지속가능성 및 글로벌 참여 보장 등 총 세 개의 정책제언을 소개하고자 함.
 - 첫째, 인공지능 관련 정책은 다양한 영역의 정책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형태(cross-policy coordination)를 취해야 하며, 특히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주체 권리(AI-specific data subject rights)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함.
 - 둘째, 모든 기술 발전의 단계마다 '다양성'을 주류화 해야 하고, 인공지능 개발의 학제성(interdisciplinary)과 다양성(diverse)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IT 부문 내 성평등 제고에 노력해야 함.
 - 마지막으로, 글로벌 남반구 지원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 및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면서, 기술의 환경영향 평가 결과를 꾸준히 기록해 나가고, 데이터 및 자원 이용의 효과성을 강화해야 함.

□ 질의응답

(Irakli Khodeli 유네스코 생명윤리과학윤리과 전문관)

- '인공지능 윤리의 개발 및 이행'과 전 세계 많은 회원국의 기타 '정치·경제적 목표'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문의함.
- (이상욱 교수) 다소 비현실적으로 여겨질 수는 있지만 '조력자로서의 윤리(ethics as an enabler)'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다양한

기술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이행 과정에서 '윤리적 측면'을 진지하게 고려할 경우 결과적으로 더 많은 '혁신'을 창출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일반 대중의 혜택이 더욱 커진다고 생각함. 즉, 윤리적 측면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반영함으로써 첨단기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정치적 저항과 법률적 규제 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 (Matthias C. Kettemann 교수) '인공지능'과 같은 다양한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네스코가 여러 전문가와 다양한 회원국의 정치적 의지를 규합하여 '인권'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관련 규칙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앞서 이상욱 교수께서 발언하신 바와 같이 '윤리'가 민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함.

(일반청중 - Mathew Maavak)

- 첫째, 인공지능 서비스 및 상품 제공자에게 법률적 책임을 부과하는 사례에 관한 선행연구가 존재하는지 문의하며, 인공지능 시스템의 (본래 기획한 기능 외 다른 기능으로까지 확대되는) 기능확장(function creep) 문제가 존재하는지 문의함.
- (Matthias C. Kettemann 교수) 인공지능 서비스 및 상품의 제공자와 이용자에 관한 선행연구가 이미 상당히 존재하며, 특히 유럽연합(EU) 사례를 중심으로 어떠한 종류의 책임(liability)을 누구에게 부과할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인공지능의 기능확장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기술 발전의 초기 단계부터 관련 위험분석(risk assessment)을 수행해 나가야 함.
- (이상욱 교수)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비윤리적 사안에 대한 법적 책임 및 규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 당시 논의의 결론은 인공지능 기술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프레임워크(general framework)와 각 사안·사례마다 적용될 수 있는 세부지침(fine tune)을 엄밀히 구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었음. 기술적·법률적으로 개별 비윤리적 사례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프레임워크 또는 세부 규정을 수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일반청중 - Hatim Mouradi)

-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를 이행하는 각 단계는 무엇인지 문의함.
 - (Irakli Khodeli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부문 전문관) 권고 이행의 첫 단계는 해당 국가의 '준비 정도'를 평가(readiness assessment)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내년 중 유네스코가 '준비 정도 평가'를 위한 매우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공할 예정임. 그 이후 '윤리 영향 평가(ethical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하고, 모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인공지능 윤리 관련 제도적 프레임워크(institutional framework)를 수립·운영하는 순서임.

□ 좌장 마무리 발언

(Irakli Khodeli 유네스코 생명윤리과학윤리과 전문관)

- 제1세션에서 협의된 여러 중요한 논의 사항 중 다음의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함. 첫째,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가 상대적으로 유연한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 '규범'으로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권고가 채택되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회원국 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음. 둘째, 한국의 이상욱 교수가 언급한 바와 같이 '조력자로서의 윤리(ethics as an enabler)'의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윤리 기준은 첨단기술의 발전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not matured yet) 첨단기술의 발전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제1세션을 마무리하며,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를 기획·발간 중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감사를 표함.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는 유네스코가 장려하는 최적사례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점을 평가함. 동 브리프 자료는 유네스코의 주요 이슈에 대한 회원국 내 숙고와 토론을 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유네스코 사무국이 각 이슈별로 취해야 할 후속조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대한민국 외교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와 '유네스코 이슈 라운드 테이블'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대해 감사를 표함.

다. (20:35~21:50) 세션 2: 사이버 공간 혐오·차별 대응을 위한 정책제언 (Policy suggestions for combating hatred and discrimination in cyberspace)

□ 기초발제 (Tawfik Jelassi 유네스코 정보·커뮤니케이션부문 사무총장보)

- 먼저, 대한민국 외교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이번 ‘라운드 테이블’을 유네스코 사무국과 함께 공동주최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함.
- 라운드 테이블 제2세션의 주제 역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함. 지난 수십 년간 ‘사이버 공간’은 완전히 변화했음. 인터넷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접근권, 이용방식, 공유방식 등이 극적으로 변화해 왔음.
 -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 간 소통이 자유로워지면서 개개인의 다양한 의견이 교류될 수 있었던 반면, △혐오와 차별 △각종 음모 이론 △(특히 여성과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불링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유네스코는 사이버 공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을 중심으로 한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온라인상 유통되는 자사 콘텐츠 내용의 적절성을 점검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현재, 사이버 공간 활동을 규율하는 프레임워크는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사이버 공간 관련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기도 함. 따라서, 정보를 ‘공공재’로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고, 유해 콘텐츠로부터 개인 이용자를 보호하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유네스코는 2023년 2월 21일 - 23일 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유네스코는 조만간 동 회의 관련 별도 웹사이트를 개설·공유할 예정임.)

□ 발표 (김수아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교수)

- 먼저, 사이버 공간에서 혐오·차별과 관련한 한국의 상황을 소개하고자 함.

-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보고서(2021)에 따르면 최근 1년 기준으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생활에서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경험을 한 사람은 70.3%이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경험이 62%,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경험이 53.2%로 나타났음.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행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6%가 혐오표현을 경험한 일이 있다고 답변 바 있음.
- 사이버 공간 내 혐오표현에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입장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담론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되기도 함.
 - 미국의 경우 혐오표현을 강력히 규제하기보다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에 중요성을 두고 있음. 사람들이 싫어하는 생각 역시 보호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언론자유에 대한 미국 헌법의 입장은 최근에도 확인된 바 있음.
 - 반면, 혐오표현의 규제가 없다는 사실이 표현의 자유의 위축을 가져온다는 입장도 존재함. 이와 관련하여 유네스코는 2021년 여성 기자들에 대한 성적 모욕과 공격이 기자들의 언론 활동을 막고, 장기적으로 공적 공간에서 발화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위축시키는 위축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 보고서(The Chilling: Global trends in online violence against women journalists)를 발표한 바 있음.
- 한편, 사이버 공간 내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자동화 기술'의 한계도 명백히 존재함.
 - 유엔 특별보고관 케이(Kaye)는 기술적 규제가 아닌 인간의 개입에 의한 규제가 혐오표현 규제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데이터 편향 이슈와 혐오표현의 세부 맥락을 판단하는 것이 자동화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임.
- 사이버 공간 내 혐오표현의 가장 큰 해악은 그러한 표현이 사회 내 존재하는 차별을 정당화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함. 즉, 온라인 혐오표현에 노출된 사람들의 인식은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그러한 혐오를 당할만하다는 인식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
 - 아울러, 아이러니와 패러디를 동원하는 혐오표현의 경우 일종의 유머로 인지되면서 혐오가 사소화되는 문제점도 존재함.

- 또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혐오표현은 사회적 소수자를 고립시키고 발언권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폭력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함.
- 미디어 리터러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음. 특히,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critical media literacy)는 인종, 젠더, 성적 지향, 장애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강조하는바, 온라인상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아울러, 디지털 시민성 교육(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역시 개인과 집단의 책임 및 사회적 영향에 집중하며 혐오를 식별하는 지식과 기술을 배양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유네스코의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MIL: Media Information Literacy) 패러다임은 문제의 본질과 혐오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에 집중함. 온라인상 정보 편향성이 존재하며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는 정보가 유통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각종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MIL 교육의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음.

□ 발표 (Lina Oueidat 레바논 국가 ICT 조정관)

- 사이버 공간에서의 혐오와 차별 대응 이슈를 큰 틀에서 인공지능 기술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연계하여 발표하고자 함.
- 인공지능은 인간과 유사한 컴퓨터 지능을 통해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술임. 인공지능은 △신경망(neural network) △머신 러닝 △딥 러닝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Natural Learning Processing algorithms) 등에 기반 함.
-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한 기존의 ‘사이버 안보(cyber security)’ 개념이 점차 ‘데이터 스피어(datasphere)’ 개념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자 함.
- 데이터 스피어는 정보 주체로 하여금 모든 종류의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게 하고(security of knowing what's happening),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데 기여한다는 개념임. (데이터 스피어는 데이터와

인간, 그리고 규범을 아우르는 기술체계라고 할 수 있음.)

- 인공지능의 윤리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부문과 사회 계층 간 존재하는 '불평등'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코로나 19 기간 중 첨단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의료 서비스의 질은 국가 간, 사회 계층 간 상당히 불평등한 양상을 보였음.
 -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는 단지 '알고리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의 취합 및 각종 기술 적용 플랫폼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데이터 권리(data rights)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데이터 주체들에게 데이터 이용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함.
- 체계화된 인종차별(systematic racism)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 결과 '알고리즘'만으로는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공통된 의견이 도출되고 있음. 컴퓨터 기술은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을 생산할 수는 있지만, 결국 변화와 진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오늘날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계속 강화되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더욱 정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회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인공지능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인 동시에,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은밀히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함. 따라서 인공지능의 발전과 이용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인공지능 거버넌스(AI governance)' 역시 큰 틀에서 '인공지능 윤리(ethics of AI)'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 결론적으로, 첨단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는 결코 첨단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함. 따라서 '첨단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학제간·부문간 접근법이 요구되며, 우리가 놓여 있는 기술환경(technical environment)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우선적으로 시도해야 함.

□ 질의응답

(Guilherme Canela de Souza Godoi 유네스코 표현의자유·언론인안전과장)

- 발표 중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대해 언급한바, 현재 ‘인공지능 거버넌스’는 어떤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아울러 동 거버넌스가 얼마만큼 인간 중심적이고 포용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함.
- (Lina Oueidat 레바논 국가 ICT 조정관) 레바논의 경우 ‘사이버 안보 전략’을 이행 중이며 새로운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하였음. 이와 같은 전략을 이행할 때 관련 ‘거버넌스’가 공고히 작동하지 않으면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그리고 ‘거버넌스’는 단지 제도적 요소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임. 따라서 ‘인공지능 거버넌스’가 보다 인간 중심적이고 포용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일반청중 - Mathew Maavak)

- 인공지능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함.
- (Lina Oueidat 레바논 국가 ICT 조정관) 혐오표현을 식별하는 알고리즘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철학, 심리학 등 과학기술 외 다양하고 광범위한 부문과의 협업이 요구됨. 그러한 협업하에 알고리즘을 개선해 나간다면 인공지능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 마무리 발언 (Tawfik Jelassi 유네스코 정보·커뮤니케이션부문 사무총장보)

- 사이버 공간에서의 혐오와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사이버 공간 이용자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하며 사람의 마음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인바, 유네스코는 앞으로도 교육·인문사회과학·정보커뮤니케이션 등 유네스코 활동분야에서 관련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임. 지정 발표자들이 공히 지적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과학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사람들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함.

라. (21:50~22:00) 폐회

□ 폐회발언 (김은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협력팀장)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라운드 테이블 공동주최 기관을 대표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함. 아울러, '인공지능 윤리' '사이버 공간에서의 혐오와 차별 대응'과 같은 중요한 이슈를 주제로 유네스코 사무국과 협력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함. 오늘의 발표와 토론을 들으며, 해당 주제에서 국가위원회가 해나가야 할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음. (이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외교부의 지원으로 발간하는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를 소개함.)

□ 폐회발언 (Dov Lynch 유네스코 회원국관계부서 과장)

- 오늘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인류에게 막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revolutionary technology)에 대해 협의할 수 있었음. 이러한 기술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교류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방식의 국제협력이 가능해 졌으며, 개별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반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 '소외'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첨단기술 발달로 인한 다양한 위험요소가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라운드 테이블은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와 유네스코 사무국 및 국가위원회가 만나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음. 오늘 토론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유네스코가 과학기술과 관련한 규범을 창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교육·인문사회과학·정보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와 함께 많은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음.
- 마지막으로 오늘 라운드 테이블을 기획해 준 대한민국 외교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함. 또한, 축사를 전해 주신 박상미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대사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림. 외교부-유네스코한국위원회-유네스코 사무국이 성공적으로 공동주최한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유네스코 '회원국-국가위원회-사무국' 간 삼각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함. 끝.